

‘어떤’ 기본소득을 옹호할 것인가

- 신자유주의의 재등장과 기본소득 논의의 향방

고봉준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

대선이 보수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정치적 기반을 잃었던 보수세력은 놀라운 속도로 영향력을 회복했고, 현재로서는 6월 초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무능, 다원화된 대중의 욕망에 대처하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 신자유주의의 내면화로 인한 전사회적 보수화 경향 등이 사태의 복합적인 원인일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양당정치의 장벽에 갇혀 약 80만표(2.37%)를 얻는 데 그친 것은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대선 막판 유권자들의 표가 두 거대정당으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심상정의 득표수가 200만에서 80만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은 ‘진보’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진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7년 이후 한국의 진보적 사회 운동은 노동운동, 시민운동, 학생운동의 세 주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어 이들 전통적 진보세력의 위상은 큰 변화를 겪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의 포디즘적 계급 타협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포디즘적 계급 타협’의 핵심은 노동운동이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에서 이윤에 대한 노동자의 몫을 주장하는 투쟁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편 시민운동은 비판적 성격을 상실하

고 친정부적인 경향을 띠었고, 학생운동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사회의 보수화로 인해 일찌감치 수명을 다한 상태였다.

이들 세력의 영향력이 급감하는 사이 페미니즘, 성소수자, 장애인, 기후 환경,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여 대안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했다. 이 장면은 정치적 영역에서 기존의 정당 정치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다양한 NGO 단체가 전면에 등장하여 ‘정체성 정치’의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한 변화이다. 문제는 이들의 운동이 각개약진의 양상을 띠는 점이다. 게다가 전통적인 정당 정치는 물론이고 87년 체제하에서 ‘진보’의 가치를 독점해온 기성의 진보세력은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한 것보다 한층 깊고 심각한 상처로 되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알던 그 ‘진보’의 해체 내지 재편은 불가피할 듯하다.

*

최근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취임사의 내용과 연결된다. 한마디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시장 중심)의 성장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의존 경제를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바꿔내는 그린 뉴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기댄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주도권을 ‘민간’, 즉 기업과 시장에 넘겨주고 규제철폐 등을 통해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대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낙수효과와 성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통적인 성장론이다. 예상컨대 이 변화는 노동관계법을 수정하고,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기후 환경에 대한 책임은 덜어주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오늘날 OECD 국가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의 하나가 바로 기후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다시 전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경험만은 아니었다. 그 상상에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가능성, 기본소득의 현실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한계, 기후위기의 구체적 해결방안 등이 포함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량, 생필품, 과일, 육류 등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반구 국가를 통해 아웃 소싱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이나 상품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대신 그들은 지구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윤을 발생시

키는 금융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막대한 이윤이 창출되는 분야는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금융 같은 분야이다.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프레이트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는 우리를 강제로 다른 사회로 이끌 정도로 노동과 삶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금융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대신 소위 ‘제국적생활양식’(울리히 브란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을 다른 국가, 다른 대륙에서 수입했다.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품은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하고 환경적 영향이 거의 없는 금융, IT 등의 산업은 자신들이 담당함으로써 선진국은 막대한 부와 쾌적한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밀(우크라이나, 인도, 브라질), 팜유(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보카도(칠레), 목화(인도), 패스트 패션(방글라데시), 리튬(칠레), 코발트(콩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품을 매개로 한 이러한 지구적 네트워크는 결국 코로나 19의 지구적 확산이라는 재앙을 초래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 앞바다에는 상품을 실은 수십 척의 컨테이너가 입항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형 마트에서는 생필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이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각국의 사람들은 로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스웨덴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이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에서 썼듯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선진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함으로써 GM과 포드가 고급 승용차 대신 인공호흡기를 대량생산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유럽에서도 프라다, 아르마니, 입생 로랑 같은 의류업체들이 생산 라인의 일부를 의료용 작업복, 마스크, 방호복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했고, 미국과 유럽의 몇몇 주류업체들은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고급술을 만드는 라인을 개조하여 손 소독제를 생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다면 자원 마련의 비현실성이나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닮았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겠지만, 코로나라는 재난상황 앞에서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도 자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자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응답했고, 여기에 이낙연, 김부겸, 박원순 등이 논의에 가세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10대 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키는 파격적인(?) 정강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과 관련하여 “뺨 사먹을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보수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선별적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 또는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유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기억한다.

*

리하르트 프레하트의 주장처럼 향후 10년 이내에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기본소득’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담당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기계(컴퓨터)의 몫이 될 것이고, 특히 선진국의 경제가 디지털 경제와 금융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한 엄청난 규모의 실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독일의 경제학자 칼 프레이에 따르면 1900년 뉴욕에는 저녁마다 햇불과 사다리를 이용해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점등인이 600명 존재했었다고 한다. 불을 다루는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이 직업은 1927년 전기가 뉴욕의 조명을 독점하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급격한 디지털화는 전 산업에서 이러한 장면을 불러올 것이다. 가령 19~20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부품산업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운전이 생업노동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디지털화가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이나 임시직 경제(gig economy)처럼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광범위한 실업과 극도로 불안정한 직경제는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의 생계도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 것이며, 그러한 사회적 압력은 결국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보수적인 정치세력은 물론이고 일부 기업가들마저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휴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크 앤드리슨,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과거에는 기본소득이 일부 진보적인 세력만의 주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소위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제 같은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문제는 더 이상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태가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독일 및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

왜 이 상황이 문제적인 것일까? 그것은 유럽의 우파들에게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진보 진영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지향은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기존 복지정책을 유지한 상태에 기본소득을 추가함으로써 생업노동과 인간의 가치의 연결고리, 즉 노동하는 인간만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관념을 해체하려고 한다. 반면 우파의 기본소득 담론은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이 원칙이므로 복지제도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 제도가 물질적인 궁핍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향후의 기본소득 논의는 프리드먼의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보수적인 정치적 구조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이후 점차 확장된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복지국가 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릴 가능

성이 크다. 이른바 복지국가 담론을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 담론이 대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통치의 일부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썼듯이,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정책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근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그 사회가 공동적으로 책임진다는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실업자, 범죄자, 기타 노동 능력이 없는 노약자 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책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상호성의 원칙과 공동체의 책무를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간주함으로써 개개인이 보험, 연금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요한다. 신자유주의는 왜곡된 ‘능력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개인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맑스가 지적한 두 가지 자유(노동력을 판매할 자유와 굶어죽을 자유)와 맞닥뜨리게 만든다. 물론 ‘선거’라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신자유주의에서도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하는 존재,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존재만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생업노동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실업자를 포함한 사회적 타자들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입증해야만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수화된 분위기 속에서 확산되는 기본소득 논의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보수세력의 승리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표되는 사회 전체의 보수화이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라면, 당분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근거 없는 불안이기를 기대하면서 살아 가야 할 지도 모르겠다.